

총리·당대표까지 하고
당원·지지자를 기득권 몰아

DJ·노무현·문재인
마음 안 맞다고 당 안 버려

대표·총리·지사 하기도
나뉘먹기 요구 안되니 탈당

수십년 몸담은 당에 침 뱉어
도덕적·이성적 맞지 않아

당대표 했던 분이
악의적 흠집내기 볼래



정성호



고민정



신정훈




이형석



조오섭

광주일보 창간 72주년 엠블럼



매일 새로운 태양은 떠오르며, 현재는 미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 밝은 빛을 뿜어내는 일출 장면을 형상화해 72를 담았다.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 낸다 설계비 31억 확보... 내년 착공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의 요람인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건립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즉시 공포돼 지스트(GIST) 부설 AI영재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통령 지역 공약이기도 한 광주 AI 영재고 설립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2월 15일 광주 과거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서 3차례나 보류·논의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해를 넘겨 올해 첫 본회의에서 13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1038억원(전액 국비) 중 AI 영재고 시설설계비용 31억8000만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올해 설계 후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 AI 영재고의 정원은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무학년·졸업학점제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졸업학점 155학점 중 20%수준에서 AI 융합 교과를 편성하며, 광주 AI 데이터센터, 실증 장비 등 기반 시설과 GIST의 AI 교육·연구 인력을 활용해 교육할 예정이다.

교원은 33명이 배치되며, 영재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 1인당 학생수 4.5명 수준을 유지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도 정원의 7%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 몫 총리 수혜자, 이낙연의 명분 없는 정치

지역 기반으로 국회의원·지사·총리·대표 지내고 탈당 행보 광주·전남 정치권 "동료 의원들 전과자로 매도" 비난 목소리

오는 11일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행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며 당 정체성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광주·전남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한 때는 동료 의원 일부를 '전과자'로 매도하면서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해석된다.

호남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전남지사 재임 시절 사실상 '호남 배려'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호남 덕'을 가장 많이 본 이 전 대표의 탈당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강조해온 '화해와 통합 정신'에도 어긋나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가 급기야 '민주당 저격'으로 변하면서 "마시

던 우물(민주당·호남)에 침을 뱉었다"는 탄식도 터져나오고 있다.

9일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낙연 전 대표의 황실수설, 갈지자 행보를 개탄한다'는 제목을 붙여 "양당 제도의 최고 수혜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양당구도를 깨고 제3지대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양당구도에서 당 대표, 국무총리, 전남지사 등 최고의 수혜를 받았던 분이 철옹성처럼 견고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서 바람 구멍을 내겠다는 모순적 발언도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리스크를 핑계로 당권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뉴스 인터뷰에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됐던 신정훈 의원은 "그 동안 함께 해온 동지들을 '전과자'로 폄하하는 것은

한동훈의 '운동권 정치 타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2020년 총선 당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체제"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전과자 프레임이 있었다. 남 이야기하는 듯한 발언,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도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이 그런 표현하는 거 자체가 맞지 않다. 민주당을 '운동권 카르텔, 특권, 범죄자 집단' 등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본다"며 "민주당에 몸담았던 게 수십 년이고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 전남에서 전남지사를 지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서 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 민주당을 향해 침을 뱉는 꼴이다. 도덕적,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전과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실 관계를 알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악의적으로 민주당을 흠집내기 위해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면서 "더구나 21대 국회 때 당 대표를 했던 분의 입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는 발언이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탈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9일 CBS 라디오를 통해 "이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꽃길만 걸어온 분이다. 5선 중 4선을 호남에서 했고, 전남지사도 했다. 호남 몫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당 대표까지 한 분"이라면서 "이런 분이 그동안 함께한 당원과 지지자를 기득권

으로 몰아붙이고 떠난다는 데 무슨 명분과 가치를 추구하려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YTN라디오에서 "웁은 결정이 아니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너무나 괴리감이 있고 실망감도 컸다"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안에서 통합해보려 노력했지만 안 될 때도 많았고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안 맞는다고 해서 당을 버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전과자 발언과 관련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당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면서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당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kwangju.co.kr

- 동물보호센터 도입 지자체는 '골머리' ▶6면
- 광주FC, 브라질 공격수 가브리엘 영입 ▶18면
- 문화 품은 건축물 열전 - LG아트센터 서울 ▶22면

본사인사
▲채희중 : 편집국장(정치·사회 담당)
(1월 10일자)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주)엔이티

· 정보통신 공사 · 소프트웨어 개발

새겨진 행복이 밝은세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15번길16, 201동 202호
TEL | 062-610-5801 FAX | 062-610-5802